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의 기여

수행과제명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의 기여*

수행과제명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 Tel: Tel: 02-3156-7167

☎ e-mail: onbike@kwidimail.re.kr

요약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에 덧붙여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advantages)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성별 효과 분석을 실시함.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 점검 및 여성장애인의 접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택면·배호중·변민수(201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가 2001년 1,134천명에서 '05년 1,789천명, 그리고 '10년에는 2,51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은 2001년 779천명에서 '10년 1,468천명으로 증가한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같은 기간 355천명에서 1,049천명으로 거의 3배 증가함에 따라, 여성장애인 비율이 31.3%에서 41.7%로 크게 증가함. 이러한 여성장애인 규모와 여성장애인 비율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에 덧붙여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advantages)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확립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시혜와 구제 차원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적(disabling)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 속에 통합(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 곤란한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영향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다르게 작용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개선점을 발견하고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앞서 열거한 연구목적들을 추구함에 있어 취업지원·고용촉진
사업으로서의 직업훈련의 효과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여하히 갖추어질 때 취업지원 고용촉진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 전망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의 수립과 그 이전 계획들간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분야에서는 맞춤형
교육훈련에 주안점이 놓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혹은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여성장애인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울림센터의 증설과 확대

개편을 통한 기능 강화가 예상되며, (지역사회 맞춤형)직업훈련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처별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및 독일의 사례 분석

-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별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및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 리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등의 역할로 인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성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사업이 없는 독일이 한국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중심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그 기간에 버금가는 훈련 이전단계의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여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과 같이 직업생활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업세계로 이행을 결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집단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라고 판단됨.

다. 장애인의 일반적 처지와 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2011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일반적 상태 및 성별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책 대상 집단 중에서 저학력, 고령자, 독신자 그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주관적 건강상태, 이동 편의, 일상생활 조력자 및 직장생활 조력자의 존재,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 능력, 이동편의 제공 요구 등에 있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및 노동시장 진입과 지위 상승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라. 남녀 장애인의 직업훈련 실태와 취업 상황 분석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관할 하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공공직업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을 이용하는 남녀 장애인의 직업훈련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기관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물량과 훈련 전문성 등을 고려해보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이 가장 앞서나, 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환경 등이 여성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여성장애인의 훈련 참여 및 취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반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새일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이용률은 지극히 낮지만 취업지원 서비스, 훈련 참여율, 훈련 후 취업 성공 효과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새일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직업훈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취업여부에 영향 요인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들의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취업여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panel logit) 확률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으로 확인한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취업확률은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이 더 높음.
- ② 직업훈련 수강 경험 또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취업확률에 (+)의 영향을 미침.
- ③ 특히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 사이에서 그 긍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

● 이는 여성 장애인은 직업훈련 희망 확률이 더 높지만 정작 직업훈련 경험비율은 여성이 더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 사이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평등의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와 운영 책임자에 대한 조사 결과

■ 여성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욕구파악을 통한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와 운영 책임자에 대한 서베이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보다 많은 여성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와 취업 가능성이 높은 훈련직종에 대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 ②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여성 장애인들 대다수는 여성 장애인 전용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재택교육보다는 집체교육을 선호함.
- ③ 집체교육시 선호하는 시설환경은 통합교육 환경보다는 전용교육, 특히 여성장애인 전용교육 환경을 가장 선호함.
- ④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과정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함.
- ⑤ 훈련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단시간 혹은 시간제 훈련을 압도적 다수가 선호함.

3 정책제언

-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발견점들을 토대로 기존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과 전달방식에 대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주관 부처별로 단기 제언과 중장기 제언으로 나누어 제시함).
- 단기 제언이라 함은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관한 제언을 의미하며, 중장기 제언은 법·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언을 의미함.

단기 정책 제언1) 본격적인 직업훈련 이수 전 단계에서의 훈련 준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선례는 장애인 중에서 중증이나 여성 장애인과 같이 직업훈련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잘 준비된 장기간의 훈련진입 프로그램(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직업생활교육 프로그램,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 직업기초능력습득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훈련진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장애인들이 해당 혜택을 받기에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새일센터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훈련 이전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어울림센터에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이것이 직업훈련을 염두에 둔 준비 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주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단기 정책 제언2)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시간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여성장애인은 전일제 장시간 훈련이 아니라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단시간 혹은 반일제 훈련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므로 이에 부응하는 단시간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독일의 경우 시간제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기숙제 직업훈련의 경우 가족과 함께 기숙 허용(김혜정, 2007)과 같은 여성 친화적 훈련환경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확충 및 훈련프로그램 설계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음(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복지지원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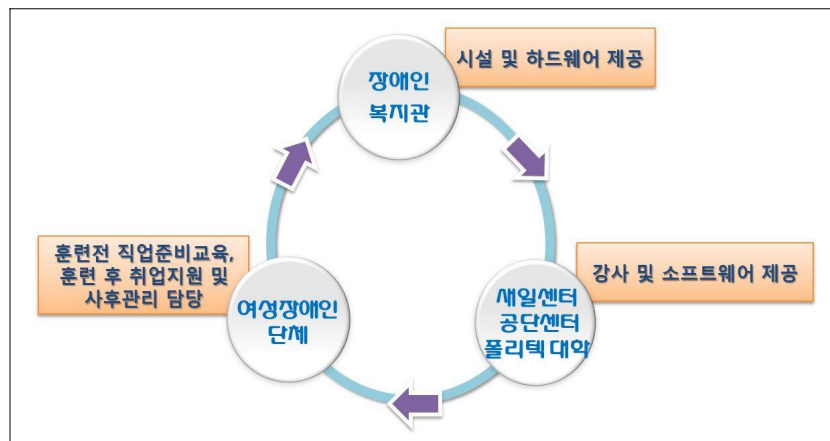
단기 정책 제언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기능 변화 필요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기능을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춰 보강하거나 새일센터에서 장애인 특화 교육프로그램 혹은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유도가 필요함(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복지지원과).

단기 정책 제언4)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취업연계 및 고용유지 서비스 연계 필요

■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연계 및 고용유지 서비스 연계 제공이 필요함.

- 이는 어느 한 기관에 의존할 수 없고 각각 다른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는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이에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및 하드웨어 제공, 새일센터·공단센터·폴리텍 대학 등은 강사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여성장애인 단체는 훈련전 직업준비교육, 훈련 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세 기관간 연계 협력 직업훈련 모델을 제안함.



[그림 1]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간 협력사업 모형

- 이러한 기관 연계 협력 직업훈련 모델은 시범사업 형태의 운영 후에 모형을 더욱 정교화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이 주효할 것으로 기대됨 (관계부처 합동: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단기 정책 제언5)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여성 장애인의 개별적 취업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 당장의 취업을 원하는 그룹, 최소한의 숙련 습득 후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그룹, 숙련 습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은 일자리에 영구 취업을 원하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콘텐츠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복지지원과).

중·장기 정책 제언1) 장애인의 자녀 돌봄 대상 확대

- 아이돌봄 지원을 장애인 아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애인의 비장애 아동 돌봄에까지 지원 확대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아동발달 지원을 포함하여 보육료의 차등적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녀양육지원서비스와 자녀교육도우미를 꼽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중 자녀 관련 지원은 장애아동 대상에 국한되어 있음.
- 어울림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 중 비장애인 아동을 자녀로 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비장애 아동 돌봄에까지 지원확대가 필요함(주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보육정책과).

중·장기 정책 제언2) 훈련수당의 상향 조정 및 근로유인 감퇴 방지를 위한 기초수급제도의 재편

- 훈련수당의 상향 조정은 빈곤에 처한 여성장애인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한계적 일자리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직업

훈련을 받음으로써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여성장애인의 근로유인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기초수급제도의 재편 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 우려에 따른 근로유인 감소문제는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사안이며, 급여수준이 수급액에 못미치는 저임금 일자리로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저숙련 지향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낮으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임.

● 수급자격 상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고임금 일자리 취업이 가능한 고숙련 혹은 반숙련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장기 정책 제언3)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 모델 개발 필요

■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를 벤치마킹한 여성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가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

■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 모델 개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공동체의 확산이 필요함(관계부처 합동: 지자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수행함.

- 이에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접근 하기에 곤란한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함.
- 아울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남성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게 다르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개선점을 발견하고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한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학술적 기여도와 정책적 기여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성별’과 ‘장애’라는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관련 후속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그동안 장애인 직업훈련의 취업 촉진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이 자료의 제약이나 물성적 분석틀로 인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사이에 직업훈련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볼 때, 4차년도에 걸친 패널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자료를 통해 통제할 수 없었던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성별 차이 효과를 검증해낸 이 연구는 방법론

적인 면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 성과분석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향후(사후) 특정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내외 장애인 정책을 리뷰하고, 전체 장애인 정책의 틀 안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위치와 위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장애인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그 안에서의 직업훈련 사업을 살펴봄.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독일의 장애인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제시(단기 및 중장기 시간 지평에 따라 그리고 주무 정부 부처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제안)
-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의 확립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기는 하나, 취업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단독으로 타 프로그램들과의 유기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취업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과 타 프로그램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직업훈련 이수 여성장애인의 취업촉진 방안 발굴 및 제시
- 모형 추정의 결과로 도출된 발견점들을 이용하여 여성 장애인 특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의 성평등한 편성의 기초 자료와 여성장애인 고용관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본 연구 연구방법론의 경우, (사후) 특정 성별영향평가 분석들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개정 작업에 활용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 곽지영(2010),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1), pp.79-104.
- 관계부처 합동(2013),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3-2017』, 보건복지부.
- 김경선·김영식(2013),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장애와 고용』, 23(1), pp.157-187.
-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01), 『2001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세연·구인순·박자경(2012),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12(8), pp.318-329.
- 김영일·이태훈·황현철(2010),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방안”, 『장애와 고용』, 20(4), pp.237-263.
- 김혜란·최영출·이석원(2004), 『충북 장애인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김혜정(2007), “독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문제에 대한 고찰”, 『직업재활 연구』, 17(1), pp.101-120.
- 남용현(2009),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사회법전 제9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남용현·심진예·전영찬(2012),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류정진(2010),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자경(2008),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18(1), pp.27-51.

- 변용찬 외(2008), 『여성장애인 교육과 사회진출 제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백은령·오혜경·이은미(2007), 『성인초기 여성장애인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RI Korea 여성 분과.
- 석재은·김가을·김경휘(2008),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의 성별 격차와 영향”, 『한국여성학』, 24(4), pp.101-140.
- 신은경·이하나(2010),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반차별적 사회복지실천의 과제 및 전망”, 『재활복지』, 14(4), pp.1-28.
- 양숙미·전동일(201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장애와 고용』, 21(3), pp.97-118.
- 양숙미 외(2011),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여성가족부(2010),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및 이용 현황조사』.
- 여성가족부(2013),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 유완식·황아운(2007), “장애인 직업훈련 효과 분석: 공단센터와 타 기관과의 취업 및 임금 효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하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pp.169-193.
- 이국주·홍자영·남용현(2008). 『한-독일 장애인 직업훈련 체제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석원·박애린(2010), “훈련유형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 통합 훈련과 전용훈련의 비교분석”, 『장애와 고용』, 20(3), pp.5-27.
- 이성규(2004),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 pp.159-179.
- 이용복·김희자·유경민(2009),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이재서·백은령(2008), “여성장애근로자의 특성과 임금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18(1), pp.93-109.
- 이주화(2010), “독일 장애학생 직업교육의 제도와 현황”, 『특수교육 연구』, 17(1), pp.3-23.

- 이한선·박자경(2011), “장애인 맞춤훈련 성과 분석”, 『장애와 고용』, 21(2), pp.79-102.
- 이한선·이효성·최종철·이국주(2011), 『여성장애인 직업영역확대를 위한 훈련적합직종 연구』,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정혜영(2010), 『여성장애인 구직욕구 강화를 위한 공단 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조상미·김지나·조정화(2010), “취업장애인의 임금 결정 요인”, 『장애와 고용』, 20(3), 75-96.
-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2012 장애인 백서』.
- 한애경(20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선천적 여성장애인과 후천적 여성장애인 비교”,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표 발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황아윤(2007),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진입 확대 방안: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황주희(2011), “고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방향 탐색”, 『장애와 고용』, 20(3), pp.33-62.
- 황현철·김영일(2010), “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방안”, 『장애와 고용』, 20(4), pp.119-148.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ursorgestellen(통합 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방 연합체, BIH), 연도별 통계자료.
- Bundesagentur fur Arbeit(연방노동공단), 연도별 통계자료.
- Bundesagentur fur Arbeit(2004), Die Lage der behinderten Menschen und die Entwicklung ihrer Teilhabe(장애인 현황 및 참여의 변화).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2010), Berufsförderungswerk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erwachsener Menschen
- _____ (2011), Berufsbildungswerk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junger Menschen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08), Berufsförderungswerk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2009). Behindertenbericht

2009.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eber die La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fuer die 16. Legislaturperiode.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BMBF), Nodellversuch des BMBF, 직업교육 보고서 200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3), Tätigkeitsberich der Gesamtbetreuung zum Program Job400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복지지원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보육정책과·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